도, '전북형 복지·보건 안전망' 강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생계 급여 지원·무상보육·학대 우려 가정 아동 지원·필수의료 등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기준보다 완화된 자체 복지 기준을 적용한 '전북형 복지·보건 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바탕으로 위기가구 보호와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고, 무상보육과 SOS 돌봄센터, 통합돌봄 365 패키지 등 돌봄 정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와 주민돌봄지원센터 운영, 자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인력 지원과 분만·소아 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건강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먼저 도는 국가 복지제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며, 이는 국가 기준(중위소득 32%)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또한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확대해 국가 기준(중위소득 75%)보다 폭넓게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형 빈틈없는 돌봄 정책'도 확대 추진되고 있다.

도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전북형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전북형 SOS 돌봄센터를 운영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 지원을 위한 '전북 하이, 아이 지원사업'과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학대 우려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운영을 통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공간 제공과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월 30만 원) 지원도 추진해 가족 돌봄과 양육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에는 전북형 365 통합돌봄 패키지를 제공하고, 고령자 주거 기반 노인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주거·생활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국비 지원 돌봄시간 외에 추가 활동지원(월 10~392시간)을 제공하고, 주민돌봄지원센터를 통해 병원 동행 등 생활지원 서비스와 복지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도는 무주·장수·임실·순창 보건의료원 봉직의 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원의료원에는 공익적 손실 비용 30억 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도내 수련병원 3곳의 전공의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를 지원해 응급의료 대응력을 높이고, 분만 취약지 임산부에게 분만 이송비 7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난임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도는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해 1인당 최대 3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방 난임 치료(부부당 최대 360만 원)와 난임 진단 검사비(부부당 최대 30만 원)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과 모아복합센터를 통해 권역별 출산·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건강 관리도 강화된다. 도는 C형 간염과 노인결핵 검진을 실시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예방에 나서고 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형 복지·보건 정책은 국가 기준의 틈을 보완해 도민 삶을 촘촘히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돌봄과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부안 갯벌 생태 보전한다

도, 총 432억원 투입… 식생복원·철새 보금자리 조성 등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생태마을 육성… 관리기반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부안 갯벌의 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구축을 위해 총 432억원 규모의 종합 보전·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해양보호구역 관리부터 식생 복원, 철새 서식지 조성, 세계유산 관리 거점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정책을 펼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갯벌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다.

우선, 연안 습지보호지역인 고창갯벌과 부안 줄포만 일원 69.5㎢를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연 3억원)을 시행 중이다. 지역관리위원회 운영과 명예습지 생태안내인 활동,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갯벌 생태계 회복과 탄소흡수 기능 제고를 위한 식생복원 사업도 병행된다. 고창 갯벌에서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150억원을 들여 칠면초·나문재·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친수시설을 설치해 생태적 기능 회복에 나선다. 부안 줄포만에서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51억 원을 투입,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과 함께 약 850m 규모의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계자연유산인 고창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해 인공습지와 탐조 시설을 갖추고 철새 서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강화할 방침이다.

갯벌 연구·교육·전시 기능을 통합한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170억원을 투입해 연구실·교육실·전시시설을 갖춘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북 갯벌 보전 정책의 핵심 허브로 기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창 두어마을은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로 선정됐다. 도는 8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관광시설 개선과 주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생태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관리 모델도 구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고창=김영식기자

새만금개발청, 관계기관과 '크루즈 산업 활성화' 협력 논의

TF 회의서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방안 집중 협의… CIQ기능 확보 등 추진 검토

새만금개발청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세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군산검역소 등 크루즈 운항과 관련된 주요 기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 시설 규모, 운영 방식(직영 또는 위탁) 등 주요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협의했다.

또한 항만 운영계획과의 정합성, 보안 및 안보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크루즈 운항에 필수적인 CIQ(출입국·세관·검역) 기능 확보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임시 크루즈터미널 내 검색 및 심사 장비 설치 가능 여부와 필요한 공간, 여객 동선 구성 등을 검토하고 실제 크루즈 입항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새만금 크루즈 입항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현 가능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귀농귀촌 2만2000명 유치 추진

도, 귀농창업·주택자금 207억 지원… 안정적 정착환경 본격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귀농귀촌인 2만 2,000명 유치'를 목표로 홍보·주거·정착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인의 소득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207억 원 규모의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투입한다. 이는 전국 지원 규모의 15.4%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귀농귀촌 단계별 21개 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 3개 사업에 총 74억 원을 추가 편성해 전북만의 유치·정착 지원체계를 한층 견고히 할 방침이다.

수도권·대도시와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선 투트랙(Two-track) 유치 전략을 구사한다. '전북 귀농귀촌 서울사무소'가 수도권 도시민을 겨냥한 집중 홍보를 맡고, 김제 소재 '전북 귀농귀촌 사무소'는 비수도권 및 인근 광역시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채널을 이원화한다.

귀농귀촌인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거 문제 해소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2개소(140호), 귀농인의 집 70개소, 게스트하우스 8개소(24실)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임시 거주시설을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는 정읍 등 9개 시군에 농촌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13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무주와 임실에는 26호 규모의 '전북형 보금자리' 2개소도 준공해 초기 정착 단계의 주거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농촌 빈집 문제에는 38억 원을 들여 '빈집·유휴시설 재활용 사업'으로 정면 돌파한다.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성이 확인된 빈집은 리모델링과 거래 플랫폼 등록을 지원하고, 노후 빈집은 철거 후 공용주차장·마을 텃밭 등 공공시설로 전환한다. 농촌 유휴시설 역시 창업·사회서비스 공간으로 재생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이끄는 현장 밀착형 지원도 확충한다. 멘토·멘티 프로그램, 실용 교육, 마을 환영회, 취·창업 연계 등 15개 지역융화 프로그램에 25억원을 배정해 원주민과 이주민이 상생하는 정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내실 있는 발전 통해 도시 패러다임 전환할 적임자"

원광대 전·현직 교수 64명,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익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원광대학교 전·현직 교수들이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원광대학교 전·현직 교수 64인은 10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이 직면한 존립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는 조용식 후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4명의 교수들을 대표해 4명의 교수가 참석해 강승구 교수가 지지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지역의 미래를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해 온 원광대학교 전·현직 교수로서 익산의 미래를 깊이 고민한 끝에 조용식 후보가 도시의 새로운 전환을 이끌 인물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먼저 조 후보가 '내실 있는 발전'을 통해 도시 패러다임을 전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익산은 외연 확장에만 치중하면서 구도심 쇠퇴와 인구 유출을 막지 못했다"며 "조 후보가 제시한 읍·면·동 단위 생활거점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은 학계의 연구 방향과도 맞닿아 있는 혁신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수들은 "조 후보가 제시한 '3특(역사·문화, 미래산업, 교통·물류) 4극(민생·경제, 일자리·청년, 복지·안전, 행정혁신)' 전략은 익산의 강점을 살린 체계적인 발전 구상"이라며 "특히 100만 평 규모의 AI·로봇·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3만 개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로드맵 등은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지킬 구체적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후보의 행정가로서의 자질도 높이 평가했다. 교수들은 "조 후보는 34년 공직 생활 동안 부동산 투기 등 사적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공익을 우선해 온 청렴한 공직자"라며 "전 시민 1인당 100만 원 민생 지원금, 어르신 무상교통, 스쿨존 개선, 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 시민의 일상을 돌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등 폐석산을 미디어아트 거점으로 조성하는 등 체류형 문화도시 전략을 통해 익산을 '스쳐 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활력 도시'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이만호기자·익산=이재춘기자

도, 1인가구 주거 안전 지원사업 확대 시행

지원 900가구→1000가구·자가주택 공시가격 2억→3억

임차가구 주택가액 제한 폐지 등… 신청 지원 기준 완화

전북특별자치도가 홀로 사는 도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보다 100가구 늘어난 1,000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주택가액 2억 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자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가구까지 기준을 상향했다. 특히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가액 제한을 전면 폐지해 실질적인 혜택 범위를 넓혔다.

지원 품목도 다양해졌다. 신청자는 가정용 CCTV 또는 주거 안심장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정용 CCTV는 인터넷·와이파이 설치 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를 지원하며,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과 전문 보안업체의 24시간 출동 서비스가 포함된다. 주거 안심장비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송장지우개, 가정용 홈캠 중 3종 이내로 지원하는데 올해는 가정 내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한 가정용 홈캠을 새롭게 추가했다.

총 사업비는 1억3,310만원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나눠 부담한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별로 접수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진안군수 경선, 공정하게 치러져야"

진안군민모임, 여론조사 방식 검증 요구

공정한 선거와 경선을 바라는 진안군민모임은 1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안군수 선거의 공정한 경선 운영과 공천 절차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민 20여명이 참여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안군민모임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안심번호 규모 변화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민 모임에 따르면 2025년 진안군수 후보군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규모는 6월 7,436개, 8월 7,412개로 7,000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9월 조사에서는 10,436개로 늘어났고 12월 조사에서도 10,447개로 1만 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7,412개에서 9월 1만436개로 단기간에 3,024개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진안 군민 모임은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경선 방식 확정 전 여론조사 방식과 의혹 관련 경위 및 조사현황 공개 △의혹 해소 전까지 비당원 군민 여론조사 반영 중단 및 100% 당원 여론조사 실시 △비응답자 콜백 방식 배제 등을 요구했다.

/이만호기자·진안=우태만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